



## “물을 소가 먹는다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는다면 독이 된다”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 공학박사 · 방사선관리 기술사

### 헛갈리는 원전센터 공모 로드맵

9월 15일까지 원전센터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장들은 예비 신청을 해야 된다. 제2단계의 디테이가 코앞에 닥쳤는데, 조바심으로 애타게 밤낮을 지새는 것은 그 사업을 책임진 산자부 장관보다 정작은 청원했던 주민들 쪽이 아닐까 싶다.

청원한 7 개의 시·군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원전센터 유치 예비 신청을 거부하기를 함께 답답했다고 전해진다. 청원이 없었던 다른 시·군 지자체 장들도 예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지?

그들끼리 답답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 사업을 거부하면 모든 일이 그들 생각대로 이뤄질 것이란 전술은 머릿속이 텅 빈 자들의 아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원한 주민들만 가슴을 조인다.

공인들이 담합하면 법은 허용해 주고, 보통 국민들이 담합하면 법으로 다스리는 차별화 법 조항이 어디에 있었던가? 감사원은 그들의 공정 거래 위반 행위의 못된 버릇을 좀 이번엔 고쳐주기 바란다.

원전센터 문제는 내 뜰 안의 문제이지 밖의 전 국토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그들은 자기 관할 권역도 모른 듯 하다. 남 눈치 살피야 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공론화 기구’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금년 2월 초에 정부가 공고한 원전센터 후보지 재-공모 로드맵은 어디에도 그런 용어나 뉘앙스를 풍길 만한 낱말은 없다. 애타는 모양새를 그렇게도 풍기려고 기를 쓴다면, 공고 내용 문구들 중에서 좀 비슷하게 구실이라도 달 만한 용어로 작명해도 좋을 것을? 해당 정책 사업을 추진할 팀에 속한 하고많은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아

이디어 메이커도 없었던 말인가?

우리 법에는 산자부 장관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배타적인 권한을 위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조직에도 없는 한 단체에 러브 콜을 해야 될 딱한 처지에 놓였다니, 장관 할 일이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위의 눈치만 살피면 된다는 말인가? 모두가 내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 듯한 원전센터 유치 사업은 어리로 가야 하나?

### “법대로”

18년 동안, 원전센터 추진에서 걸림돌은 해당 주민들 반대 주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정부 쪽이 이슈의 진원지다. 원전센터 로드맵의 일차 관문은 무난히 넘겼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산자부 장관도 예상 못했던, 정부 안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다. 그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공론화 기구'의 한 아이디어가 공고된 로드맵 중간에 틈새로 끼려한다.

청원한 주민들은 어지럽다. 그들은 국가적인 정책 사업을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일차 관문을 막 통과하고 나니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 사업 추진의 주체인 정부 쪽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니 어떻게 된 영문을 모르겠다고 야단들이다.

원전센터는 이래저래 말썽이다. 한 말로, 정부 소신 부재이다. 산자부든, 청와대든, 열린우리당이든, 너-나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법대로'가 빛을 바랜다.

한 인터넷(권혁창 기자, 연합뉴스 2004. 08-30 06:21)은 「공론화 기구 출범하면 선정 일정 중단」이란 제목에서 “정부는 현재 세워놓은 부지 선정 일정을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모색하자는 쪽인데 반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론화를 위해서는 모든 원전 건설과 원전센터 부지 선정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정부나, 국회나, 청원 주민들이나, 환경 단체나, 이를 관망하던 국민들이나, 이것을 꼬집는 필자나 너나 내가 따로 없이 모두가 도깨비에 홀리고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극도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원칙 없는 것이 원칙’인 이런 정부 정책을 믿고 고향에 원전센터 유치를 바라면서 미쳐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정부가 낸 공고가 수시로 고쳐지는 모습을 가슴을 치면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쯤이면, 불교 경전이 준 교훈인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양형진 지음, 「과학으로 세상 보기」, 55쪽)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 공식일지라도, 정부의 논의를 ‘우유’인지 ‘독’인지 구분할 길이 없어진다.

### 모르쇠 세상

작년 정부의 1차 원전센터 공모 10일 전 그리고 지자체가 신청해야 할 마감날이 닥쳐오면서 필자는 고향 지자체장에게 고향에 원전센터 유치를 권하던 편지를 3차례나 보낸 적이 있었다. 아직까지 나리로부터 단 한 마디의 답장이나 전화 한 통도 없었다.

필자의 공무원 시절에 견준다면, 일종의 민원을 그토록 모르쇠로 무응답했다면 추상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수많은 민원들이 인터넷 바다에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와 감당하기 버거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쇠가 가장 좋은 수단

방편이란 착각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원전센터와 관련되면, 언론인들이거나 공무원들은 거의 전부가 모르쇠 주의로 일관된다.

필자만큼 원전센터에 관련된 신문 칼럼의 주장들에 거침없이 반론의 편지들을 보냈던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실에 보낸 편지에도 결과는 다투는 스토리였다.

### 필자의 글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담았기에 그런지 독자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그들 모두에서 다른 이슈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 달랐다. 하지만 필자 반론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지적이었다. 답변이 필요했던 반론도 많았다.

그들 중에서 최근에 보내진 사연의 한 사례를 여기에 공개한다. 비록 공개 전에 당사자와 상의하지 못한 필자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서는 이미 참조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미 공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사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이 원고를 쓰는 시점(9월 5일, 시일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까지 당사자를 포함하여 참조로 보낸 이들 중, 경북 광역 단체의 소속인 과학기술 담당관실의 과장으로 부터 전



화 한 통을 받은 것이 고작이다. 그는 편지를 받은 사실 확인을 해주었고, 답신이 필요한지도 친절하게 문의하였다.

필자는 답신을 원치 않는다고 전하면서 단순 참조 내용임을 강조했고, 아울러 감사를 드렸다. 정부나 인간 관계의 신뢰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다음 글들은 편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I) 그리고 지역 신문 홈페이지에 올린 글(II)로 나뉘었다. 나중 내용 중, 원전센터와는 거리가 먼 한 지방 행사의 일부도 포함된다. 앞 편지 내용에 있는 이벤트에 참고 될 자료라 생각하여 삭제하지 않았다.

I. <존경하는 김광원 의원님께 진정합니다.> 2004년 8월 27일

국회의원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 농해수산부 분과위원장님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 【글 요약】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원전수거물센터: '원전센터'>를 울진에 유치하자는 운동이 주민들 사이에 다시 한번(작년에 이어서) 거세게 일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동안 제가 그 일로 활동했던 참고 자료들을 보내드리며, 그리고 김 위원장님의 도움 없이는 그 일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면서 감히 이 편지를 드립니다.

울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김 의원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글을 올립니다. 헤아려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 【배경】

이 글을 드리기 전에 많은 시간 동안 망설였습니다. 중앙일보(8월 24일자 35쪽)에 실린 문창극 칼럼 「우락샤(붙임 참조)」를 다시 꺼내 놓고 몇 번이고 되풀이 읽고나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붙임 자료인 김용수 울진 군수님께 보내진 3통의 편지들 중, (1)에 답았기에 생략합니다. 아직 제 주저지는 서울입니다만, 필요에 따라 주소지는 쉽게 고향으로 옮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울진 태생이고, 아직도 500여 년 전부터 저희 주씨 선조들은 대를 이어오면서 울진을 지켜가고 있으며, 그리고 친형님께서선 선친의 가업을 아직도 고향에서 그대로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이번처럼, 울진군에 원전센터 유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용수 군수님이 원전센터 유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청원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정당한 사유를 분명히 밝혔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불안 사태와 같은 엄청난 국력 소모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원전센터는 울진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전공은 원자력공학입니다. 고향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저를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반핵 단체들의 헛소리들도 저를 충동질했을 것임을 밝힙니다.

#### 【지자체장의 결단 필요】

김용수 군수님께서 원전센터 유치를 반대하신다는 자신의 의중을 공식석상에서 수시로 내비치시는 처신들을 울진발전포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이미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울진군의 3개면 주민들(북면, 찬성 42%, 기성면, 42%, 그리고 근남면, 40%)은 충정으로 자발적 원전센터 지방 유치를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8/25) 들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부의 한 리서치 조사는 울진 주민의 53%(55%임)가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한다고 전언합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이제 군수님의 독단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거부할 정책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미래 울진 발전의 청사진이 그대로 담겨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되고 만 것임을 군수님을 포함한 군민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 반드시 정부의 원전센터 부지 선정 로드맵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원전센터 예비 신청을 본의든 아니든 울진군은 당연히 정부의 절차에 따라 추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 현안에 대한 찬반 결정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려줘야 바른 결정입니다. '2005년(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이벤트를 핑계 삼아 주변의 다소 강경한 반대의 충동질을 받을 지라도 주민들에게 주민 투표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 일을 결정하게 유도하는 행정은 군수님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벤트란 본래 일회성의 한 곳-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센터 유치 현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울진군의 백년대계를 건도박과 같은 정책 사업인 것입니다. 찬반 투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장의 책임 소관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한 이벤트를 핑계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주민 투표 권리마저 물리적으로 거부할 경우, 거기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이벤트 홍보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까?

**【김 의원님께 간청】**

저는 울진발전포럼 고문직(전화

054-781-0178)도 자청하였습니다. 8월 26일부터 그 단체는 군청사 마당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 순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할 합당한 근거도 밝힘 없이, 군수님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일방적인 행정 행위로서 예비 신청을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울진군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임을 감히 예측해 봤습니다.

울진 발전포럼은 이미 여러 차례 황지성 총대표님을 통해 그와 같은 예측된 사태의 책임을 군수님이 져야 할 것이란 성명서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로 군수님께 편지나 전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 번이나 쓴 편지들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답신이나, 또는 전화로나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리는 군수님께 또다시 간청할 양순한 선비는 아닙니다.

많은 울진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군수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군 행정을 펴가는 일이 없도록 김 의원님께서 주민들 편에 서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Ⅱ. <지역 신문에 실린 금주의 두 이슈들>**

「주송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 울진신문 홈페이지(www.uljinnews.co.kr/자유계시판)—

이번 주에 발행된 지역 신문들은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리허설 격인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행사(울진신문) 그리고 일본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를 방문, 일본의 원전센터 실상을 자세히 스케치(울진타임즈)한 장문의 두 기사들을 실었다.

많은 군민들은 앞으로 울진 지자체가 고민하면서 치려야 할 그들의 참모습들을 궁금히 여기면서 예의주시할 것으로 짐작된다. '미래 울진 건설'이란 큰 테두리로 묶고, 두 사안들을 한 덩어리로 본 총론적인 눈에는 서로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야 할 각론들에서는 서로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이번 주(8/30~9/5)의 얘기는 울진 신문들이 전하는 그 기사들에 바탕을 두고, 서로의 공통점들 그리고 다른 점들을 살펴본다. 성질이 급한 독자라면, 그런 공용들이 서로가 상극이라 한쪽은 틀림없이 패배할 것임을 전망할 것이고, 다른 느긋한 쪽은 두 가지 모두를 감싸 안고 갈 현안으로 받아들인다.

**Ⅱ-1.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국제학술심포지엄, 그리고 그 전망>**

—(울진신문, 2004년 8월 25일, 4쪽)

울진 신문은 지난 8월 20-21 양일간, 울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유기농업 국제심포지엄'을 스



케치한 기사를 실었다. 거기 여러 곳들에서는 2005년 7월 22~25일까지 울진 왕피천의 20만 평에서 열릴 '세계친환경엑스포'가 안고 갈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예컨대, 주된 이슈의 하나는 그 행사가 한 정치 이벤트나 축제 정치 쇼가 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 주된 까닭은, 울진이나 다른 곳에서도 아직 유기 농업을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유기 농업을 촉진시킬 한 선전 대회의 성격임을 그 바탕으로 삼았다.

자칫하다간, 역사적인 유기 농업의 경험이나 실체가 없는 울진의 유기 농업 실상을 국제 사회에 소개할 우려까지 내포된(누가 될) 한 국제 행사란 기자의 전망도 덧붙였다.

—도박성 울진군의 균정—

금싸라기 같은 170억 원의 예산을 들인 한 국제 행사를 치루고 나면, 그 반대 급부로 울진 주민들에게 돌아올 이득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챙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아쉽게도 신문에서는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울진군청이 마련한 자료에는 전체 농지 5,600ha에서의 2002년 기준 6%이던 유기농 면적이 2004년 23%로 확대된 자료만이 유일하다. 그것도 국제 행사를 미리 준비하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농가들에 지원하여 이룩한 성공작이란 다. 가상, 일백 퍼센트 달

성한들, 울진이 소유한 유기 농지란 겨우 5,600ha에 불과하다. 과연 그렇게 비좁은 땅에서 아무리 소출을 높인다 한들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민 소득 1만 불 시대에 이르기 전인 1970년대, 우리 농농사의 주종이던 「통일벼」를 기억하자. 필리핀의 시험장 논에서 벼의 다수확 품종(통일벼)을 개발, 수확한 벼 씨를 들여와 우리 농가들에 나눠주던 시절이 있었다. 절대 부족한 쌀을 좁은 땅에서 좀더 많이 소출해내려고 발버둥치던 일이 어제 같은데, 그 쌀의 입맛을 따져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는 버렸다.

—유기 농업의 허구—

‘유기 농업’. 말로는 참쌀 것처럼 윤기 나고 찰지다. 하지만 그 폐해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유기 농가에서 오리를 키울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오리들이 벼 포기들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므로 논이 한 구석에 몰아 가둬놓고, 비용을 댈 당국의 눈치 보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하소연 글이 인터넷에 자주 오른다. 오리를 보급한 한 아이디어가 군의 자료에 나타난 실적인, 유기 농사를 촉진시킨 효과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기 농사의 소출은 다른 농사보다는 1/3 정도 감소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기 농산물의 값은 3

배를 더 쳐서 받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는 유기 농가 쪽이 보통 농가들보다 손해 볼 농사를 지어라고 지자체가 유도하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닐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과 견준다면, 울진군의 총면적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아주 높아서 상대적으로 확보된 절대 농지 면적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울진 농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적으로 자급 자족이 안 된다. 게다가 유기 농법을 택하면 소출이 1/3일로 감소된다.

—특정 집단의 이해 득실—

그렇다면, 부족한 농산물은 외국의 값싼 쌀(유기 농법이 아닌)을 들 어와야 울진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다. 가상, 울진군이 갈망하는 100% 농가들이 유기 농업의 농사를 짓게 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이런 문제들을 울진 지자체 나리가 해결할 대안을 세워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신문이 지적한 유기 농업의 성공은 수지가 맞아야 하고, 수지가 맞을 경우들을 두 가지로 예시했다. “물론 울진의 ‘한농복구회’나 혹은 남미의 기초공동체(Base Community) 같은 곳에서 쉽게 (수지 맞추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유 경쟁 체제에서 살아가는 일반 농부들에게 유기 농업이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벤트—

우리 생활에서 한 ‘이벤트’를 찾는다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안의 안위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해오던 ‘굿-잔치’를 상기하면 이해가 쉽다. ‘2005 올진세계친환경엑스포’란 거창한 상표(로그)라 할지라도 굿-잔치의 행사 범위를 초월할 수 없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굿-잔치의 한계를 가름할 한 우주 공식이다.

“아무리 집안이 넉넉한 부자일지라도 3번 굿을 하면 가세가 기운다.”는 선친의 말씀이 되뇌어진다. 한양대학교 정 민 교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칼럼(중앙일보, 8월28일, 26쪽)이 필자의 온 몸통을 감전시킨다.

“유기 농업 엑스포는 참으로 큰 실험이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울진에서 실험되는 유기 농업이 인간과 자연에 현실성 있게 유익하도록 지원할 뿐이다.”로 끝을 맺는 기사를 보고, 필자의 가슴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이 다가올 한 국제 행사를 울진에서 치를 소회는 과연 어떨까...?’

Ⅱ-2.〈로카쇼무라에 비취본 울진 방패장 유치 문제〉

—(울진타임즈, 2004년 8월 25

일, 12쪽)

“해외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현실 직시해야”

“에너지 자급 자족 가능케 하는 원자력개발 중요”

“방사능 물질의 실체에 대한 확실한 정보 ‘필요’”

글 요지가 화두부터 심상치 않게 느껴진다. ‘에너지 자급 자족’이란 구호가 첫눈에 띄어 부답이 된다. 그리고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다.”란 소재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민의 직접 결정 필요”란 소재목으로 나뉘고 거기서 울진의 모두에게 많은 주문을 한다.

사실, 필자가 울진의 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동기는 아주 천진난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 싫든 좋든 원전이 고향에 들어와 운전중에 있고, 울진 주민 자신들로서는 선택할 여지없이 그들과는 숙명적으로 더불어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란 무엇인지 알고 나면 다소나마 거기에 공포증을 잊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군민들처럼, 일상 생활이 편해지리란 초심에서 시작했다.

그런 취지로 보자면, 위의 큼직한 세 가지 문제점들은 필자로는 부답스럽기도 하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긴 해도, 그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들은 필자의 초심에 가장 잘 어울린다.

방사능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전

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여러 번 들어야 이해될 것이다. 이전에도 한 말이었지만, 갓 태어난 애기가 “엄마”라고 부르기까지는 3천 번 이상을 연습하고 나서야 비슷한 발음이 나온다고 한다.

원자력을 배우지 아니한 주민들은 애기와 크게 다를없을 것이다. 올진 발전포럼의 대전 견학 행사(올진 주민들, 1회 약 80여 명이 대전 소재 한수원 환경기술원을 방문, 원전센터의 실상 견학) 때마다 필자가 빠질 수 없는 까닭이다.

지금 우리 골치를 썩이는 방사능 물질의 실체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원전 연료인 우라늄을 태워 얻기 때문에 생겨난다. 총동질(?) 핑계로, 아주 급한 방사능의 실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뒷자리로 밀려나도 할 수 없다.

우선 급한 신문 얘기를 뒤로 미뤄놓고 가면, 후회스럽기 때문에 신문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가다 보니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거북이처럼 기다보면, 토끼를 앞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신문에서 지적된 에너지 문제들은 다음으로 미룬다.

신문이 전하는 울진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걸림돌들을 다음에 요약한다.

#### ※ 정부에 주문

—정부의 원전센터 지정 활동의 투명성 확보

—원전센터 공청회와 토론회 빨



리 개최(9월 9일 울진군청 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 확정)

—한수원 동해안 추진실의 소극적 업무 자세 질타.

※ 주민들에 주문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주민들이 입을 손실과 득실을 냉철히 살필 것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이익 집단들 주장들의 허구성을 눈여겨 볼 것

—한 몫 챙길 유령 단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왕(원전)을 심하게 비판하는 신하(반핵자)가 가장 심한 간신(최대수혜자)

—원전 사기꾼의 농간을 피하려면, 원자력과 방사능을 더 많이 공부.

※ 군수와 군 의회 행정 관계자들에 주문

—3 개의 면들이 유치 청원한 사안을 아직도 지역 공론화 못한 행정을 질타

—군수나 군 의회는 3개 면의 청원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라

—9월 15일까지 군수가 예비 신청을 반대나 신청해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들 것임

—그런 거센 주민 저항을 피하려면,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수 조건

—원전센터 같은 중대 사안을 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 투표로 결판

—추가 원전 건설을 언론에 시인했던 군수는 원전센터 유치 반대의 명분과 이유를 밝혀라.

※ 지역 사회 단체들에 주문

—반핵이든 친핵이든 당당히 자신들 입장을 밝히고 대주민 홍보를 하라

—한 쪽을 바라보는 눈은 그 반대 쪽은 안 보인다.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반대 쪽도 살펴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의 원전센터 사례를 참고하자

—울진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 민주주의 도구가 필요

—군수, 의회 그리고 사회 단체들은 그들의 주장을 개선, 원전센터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라.

※ 결론으로

—님비(nimby) 현상은 자연스럽지만, 원전과 원전센터는 반드시 필요

—에너지 전쟁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그리고 울진 발전 양쪽을 도울 원전센터 정책은?

—환경 보호 그리고 울진 발전에 기여할 윈-윈 전략은?

—황주호 교수의 “원자력은 ‘악마의 선물’ 대접”을 인용, 원자력을 신의 선물로 길들이기.

필자는 어제(9/5일) 울진 현지를 갔었다. 예비 신청을 10일 앞둔 군

청 안의 일요일은 한가로웠다. 군당직자만 가끔씩 들락거렸을 뿐, 다른 공휴일의 관가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았다. 뜰 주차장 한 모퉁이는 청사 안과는 사뭇 달랐다.

유치 단체 청년들 10여 명이 천막을 치고 긴장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지난달 26일부터 10명 3교대로 24시간 군청을 지키고 있다고 전한다. 군청 관계자는 천막을 견어치우도록 지시를 했다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울진군의 달라진 한 모습이 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짓은 NGO 단체인 반핵 단체들만이 취할 수 있는 전매 특허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 헛소리로는 더 이상 울진 주민들을 속일 수 없게 됐다. 그들은 뒤로 숨고, 울진포럼 청년들만이 그들을 대신하여 군청을 지킨다. 일부 청년들은 두 대의 차량으로 홍보 연설의 가두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읍내 곳곳에는 백여 개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반핵’, ‘친핵’ 등의 구호를 적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땅 어디에 몰래 감춰둔 ‘핵’이 있었든가 싶었다. 그들의 구호들은 북한을 제외한, 한국에 없는 핵을 하나같이 규탄하는 내용들이 다.

평화의 상징인 ‘원자력’을, 죽음의 화신으로 보는 ‘핵폭탄’으로 그들 모두가 착각하고 있었다. ☹